

3 EU 집행위원회, '유럽혁신법' 제안

→ 유럽의 아이디어가 유럽 밖에서 사업화되는 '혁신 역설'을 법으로 해소

- EU 집행위, 자금·판로·규칙 장벽에 '제도 통일'이라는 하나의 해법 제시
 - EU 집행위는 혁신 기업의 성장 장벽 해소를 겨냥한 유럽혁신법(European Innovation Act)을 제안, 유럽의 아이디어가 역내에서 개발되고 투자받아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 ('26.9.9.)
 - 제안 배경에는 유럽이 세계 수준의 연구와 인재를 갖추고도 유럽에서 창출된 아이디어가 정작 유럽 밖에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적 약점이 반복되어 왔다는 집행위의 진단이 자리
 - 이번 법안은 ▲IP 금융 확대 ▲회원국 공동 R&D 조달의 두 축으로 구성되며, 규제 샌드박스 별도 제안과 짝을 이뤄 제도 통일 방식으로 접근하는 점이 기존 지원책과의 차별점
- 단일 혁신 시장 구축으로 GDP 최대 4,520억 유로 창출 기대
 - EU 집행위 공동연구센터(JRC)는 개혁 이행 수준에 따라 향후 10년간 GDP 2,560억~4,520억 유로가 추가 창출되고 고효과 시나리오에서는 약 50.7만 개의 일자리가 뒷받침될 것으로 추산
 -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▲IP 가치평가 프레임워크 ▲IP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▲공공 R&D 조달 단순화를 하나의 틀로 묶어 회원국별로 갈라진 제도의 분절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
 - '28년까지 아이디어가 확장되고 자본이 자유롭게 순환하는 진정한 단일시장 완성을 목표 시점으로 제시, 이번 법안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

→ 기업의 자산·시장·규제 진입 장벽을 단계별로 낮추는 3대 수단

1. (IP 기반 금융 확대) 보유 특허를 담보·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

- 무형자산 가치평가의 어려움에 따른 자금조달 제약 발생
 - IP 기반 금융은 법안의 두 축 중 기업의 자금에 관련한 축으로, 스타트업이 이미 가진 자산을 인정받지 못해 자금이 막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조치
 - 기술 스타트업은 수백만 유로 가치의 특허와 독자 기술을 보유해도 실물자산과 달리 가치 산정이 어려워, 투자자와 대출기관이 담보로 인정하기를 꺼리는 상황이 반복

- 그 결과 성장 초기 단계의 대출과 투자 확보가 특히 어려워지며, 집행위는 이를 유럽의 우수한 IP가 사업화 자금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 병목으로 규정하고 법안의 출발점으로 설정
 - EU 공통 IP 가치평가 프레임워크로 회원국마다 다른 잣대를 하나로 통일
 - 법안은 일관성이 부족했던 IP 평가 관행을 EU 공통 가치평가 프레임워크로 정비, 어느 회원국에서든 동일한 기준으로 무형자산 가치를 인정받는 기반 마련
 - 여기에 IP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구축과 시장 출시를 돕는 전문가 자문 지원을 병행, 평가에서 거래와 활용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 체계 구성
 - 평가 기준이 통일되면 IP가 투자 심사와 대출 담보에서 통용되는 자산으로 격상되고 거래 시장 형성으로 유동성까지 확보되어 자본이 없던 혁신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가 확대될 전망
 - 연간 최대 102억 유로의 추가 자금 창출 기대
 - 집행위는 IP를 담보로 한 벤처캐피털과 대출 형태의 추가 자금이 연 27억~102억 유로 창출되고 기업의 행정비용도 연 3,500만 유로 절감될 것으로 추산
 - 이번 개혁의 목표는 스타트업에 신규 자금을 더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유한 IP를 자본 조달 수단으로 만드는 것으로, 재정 부담 없이 민간 자본을 동원하는 설계
 - 하한 27억과 상한 102억 유로의 약 4배 격차는 효과가 금융기관의 평가 체계 수용 정도에 좌우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공통 프레임워크의 시장 신뢰 확보가 성패의 관건으로 부상
- 2. (공동 R&D 조달 활성화) 공공 구매력을 신기술 수요 창출 동력으로 전환**
- 대규모 공공 R&D 지출에도 수요 창출 기능은 미활용
 - IP 금융이 기업의 자산 쪽을 손봤다면, R&D 조달은 공공기관이라는 큰손 구매자를 신기술의 첫 고객으로 세워 시장 쪽 병목을 푸는 조치로, 정책의 초점이 공급에서 수요로 전환
 - 유럽의 공공기관은 이미 R&D에 대규모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나, 회원국마다 조달 규정이 달라 신기술을 구매할 때 법적 판단이 불확실하고 나라 간 공동 구매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지속
 - 집행위는 조달이 신기술의 수요를 만드는 역할에서 현재보다 훨씬 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진단, 규정 통일을 통한 수요 창출을 법안의 두 번째 과제로 설정



- 공통 절차 도입으로 27개국 분절 수요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
 - 법안은 EU 공통 R&D 조달 절차를 도입해 발주와 계약의 법적 확실성을 높이고, 서로 다른 회원국의 공공구매자가 공동으로 조달을 수행하기 쉽게 만드는 실행 체계 마련
 - 헬스케어와 교육, 클린 모빌리티 등 사회 난제 해결 기술이 우선 수혜 분야로 거론, 공공이 첫 구매자로 나서면서 개발된 기술이 실제 현장 활용으로 더 빠르게 이동하도록 지원
 - 27개 시장으로 쪼개졌던 공공 수요가 하나로 묶이면 개별 회원국 단위로는 만들기 어려웠던 신기술 초기 시장 규모 확보가 가능, 혁신 기업에는 첫 대형 고객을 확보하는 경로로 작용할 전망
- 기업 이익 연 259.2억 유로로 법안 내 최대 경제효과 항목
 - 집행위는 공통 조달 절차 도입 시 기업에 연 259.2억 유로의 추가 이익이, 공공구매자에는 연 약 10억 유로의 비용 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며 양쪽에 모두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 제시
 - 집행위 공동연구센터(JRC)는 조달 1유로당 공급 기업에 약 3유로의 수익이 돌아온다는 실증 근거를 토대로, R&D 조달 개혁을 법안 전체 경제효과와 최대 동력으로 지목
 - 신규 재정 확대 없이 기존 공공 지출의 집행 방식 전환만으로 성장 효과를 만드는 논리로, 공공 예산이 소비가 아닌 투자로 작동한다는 근거가 입법 정당성의 핵심 축

3. (규제 샌드박스 구축) 국가별 실증 제도를 공통 프레임워크로 일원화

- 신기술 영역에 EU 공통 샌드박스 프레임워크를 부여
 - 자금과 조달이 기업의 돈과 판로를 다뤘다면, 세 번째 수단인 규제 샌드박스는 시장에 나가기 전 단계에서 규정이라는 마지막 장벽을 다루는 조치로 혁신법과 별도의 이사회 권고안 형식으로 제안
 - 샌드박스는 이미 일부 EU 법 영역에서 운영 중이나, 특정 법령이 없는 신기술 영역에서는 국가마다 접근이 달라 어느 나라에서 시험하는지에 따라 규칙이 바뀌는 불확실성이 기업 부담으로 존재
 - 권고안은 기존 법령이 다루지 않는 영역에 EU 공통 프레임워크를 부여해, 기존 규제 모델 밖의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 겪는 불확실성을 27개국 어디서든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

- 기업에는 규정 적용의 명확성을, 규제기관에는 개정 근거를 제공
 - 샌드박스 안에서 기업은 기존 규정이 자기 기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하고, 규제기관은 그 기술을 실제로 지켜보며 현행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실증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
 - 기업에는 기존 규정이 신기술에 적용되는 방식의 명확성을, 규제당국에는 규정 개정 필요성을 판단할 실증 증거를 제공하여 피규제자와 규제자가 함께 배우는 양방향 기능이 특징
 - 규제가 기술을 사후에 승인하던 관계에서 기술과 함께 배우며 규칙을 다듬는 관계로 바뀌는 셈이며, 3대 수단 중 시장 진입의 가장 앞 단계를 담당하는 장치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이 조치의 의미

출처: European Commission, 외(2026.9.)

https://ec.europa.eu/commission/presscorner/detail/en/ip_26_1810

<https://k-erc.eu/2026/09/europe-trends/34260/>

<https://www.innovationnewsnetwork.com/eu-unveils-european-innovation-act/73827/>

<https://www.openaccessgovernment.org/the-eu-has-a-new-european-innovation-act-to-help-european-ideas-compete-globally/214064/>